



디지털타임즈

## 조규환 기자

# 지식강국으로 이끄는 특허정보

“특허에 공개된 기술의 71%는 다른 문헌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의 대부분이 특허를 통해 처음 알려지는 것이다.(미국 특허청)”

“정부부문에서 수행한 연구개발(R&D) 사업 중 이미 개발돼 특허까지 받는 기술을 중복개발한 과제가 65%다. 매년 연구개발 중복투자로 200억달러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유럽특허청)”

“R&D 수행시 특허정보를 활용할 경우 연구비용의 11.2%를 절감할 수 있다. 2003년 전체 R&D 투자비를 여기에 적용하면 약 2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한국전산원)”

이들 3가지 분석 사례는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 조사와 특허정보의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특허행정 인프라가 구축돼있고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국제 특허출원 세계 7위의 지식강국이다.

하지만 기술개발 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체계적 활용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쟁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해 경쟁우위 전략을 세워야한다.

미찬가지로 치열한 R&D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행 특허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수적이다.

현대리서치가 지난 2003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연구수행자의 55.4%는 R&D 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전략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구인력의 40% 가량은 연구개발에 특허정보를 활용한다고 밝혔지만, 주로 정보를 얻는 채널은 전문 학술저널이나 세미나를 통해서라고 답했다.

체계적인 특허정보 분석없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계획을 마련하고 특허정보를 국가 R&D 혁신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특허청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주요 R&D 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과제 선정단계에서의 선행특허조사와 성과평가 단계에서의 특허동향 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국가 R&D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내년부터 시행될 연구개발 성과평가법에도 특허출원건수와 등록건수를 핵심 성과지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허정보의 체계적 활용은 경쟁 대상 특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가능케한다.

선행특허의 검색은 기술발전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신기술 흐름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게한다.

당연히 기술의 목표 시장 추이와 시장성을 파악해 R&D 사업에 피드백 함으로써 특허우위 전략 확보와 함께 중복 투자도 방지할 수 있다.

결국 효율적인 R&D를 위한 첫 단추가 특허정보의 체계적인 분석과 활용인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R&D투자비는 6조원이 넘는다.

이런 관점에서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이 올해부터 열고 있는 ‘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전략 세미나’는 R&D 주체들이 특허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인 토대로 마련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열고 있는 이번 세미나는 개최 때마다 성황이라고 한다. 올해 25차례가 열릴 예정이다.

국제특허 분쟁사례와 대응전략, 연구기획 및 개발과정에서 특허정보 활용, 특허정보 검색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무적인 내용들로 꾸며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공공연구부문에서는 자발적으로 특허맵 작성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을 설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특허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통해 양적인 지식강국에서 한발 나아가 질적 수준도 높은 지식강국으로 도약해야 R&D 투자 규모에 맞는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이다. @